청년은 무조건 약자? 폐지 줍는 노인이 먼저다

에스프레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친구들과 서울 강남이나 성수동처럼 '힙하다' 고 알려진 동네에서 저녁을 먹다 보면 종종 착잡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을 목격할 때다. 한껏 멋을 낸 청춘남녀 사이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만큼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으리라. 누가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나이 든 건 죄가 아니라고 했나. 굽은 허리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는 그 노인들은 단지 늙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시포스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었다. 제우스의 분노도 한국 사회 현실만큼 모질진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 를 실시했다. 해당 실태 조사는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 수를 약 4만20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 하루 5.4시간씩 주 6일을 폐지 줍는 데 쓰고 있지만 월 소득은 15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다소 의외의 사실도 알게 됐다. 실태 조사가 진행된 게 작년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다. 그런데 다들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네, 70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98.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모두 2023년 기준) 말은 많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집단에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새삼 깨달았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지원? 단편적 세대론에 진짜 약자 묻혀 저숙련 여성·지방 고졸 청년 등 뭉뚝한 세대론보다 세밀 접근을

정치권은 단순한 세대론을 선호한다. 그 세계관에서 기성세대는 강자고 청년은 약자다. 고령의 국회가 청년보다 노인을 비롯한 기성세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은 단골 레퍼토리다. 그래서 정치의 포커스는 으레 청년들에게 맞춰진다. 2015년 '헬조선'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쓴 뒤에는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졌다. 엄청난 규모의 구직·주거 비용을 지원했고 지역마다 관련 단체들이 활동할 센터를 만들었다. 더한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돈을 주기도 했다. 청년 딱지만 붙이면 실효성이나 우선순위를 따지는 비판은 사그라들었다.

단편적인 세대론에 진짜 약자들의 삶은 묻혔다. 폐지 줍는 노인,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중장년 여성,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5060 남성들이 대표적이다. 사실 청년 담론도 '지방 공장에서 일하는 고졸' 청년들은 배제된 채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정치·사회적으로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약자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기업 여성 임원 비중을 늘리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밥을 제공하자는 정치인은 있었어도 저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지 않았나.

청년은 약자이니까 무슨 무슨 지원을 늘리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2030 세대는 이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 뭘 퍼준다고 지지하지 않는다. 각종 지원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뿐더러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그럴 돈이 있다면 먼저 지원해야 할 건 당장 끼니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끝나면 각 당은 세대별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그들의 세대 접근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은 약자"라는 식의 뭉뚝한 세대론을 펴는 정당보다 세밀하게 접근하는 정당에 표를 줘야 한다. 디테일은 결국 국민을 향한 애정과 관심 어린 관찰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말이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22]

청년 화가의 '꿈의 색'

스페인 화가 후안 미로(Joan Miró ·1893~1983)의 꿈은 카탈루냐의 하늘색을 닮았다. 고운 색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혹독했다. 장인 집안에서 태어난 미로는 부모를 닮아 일찍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돈 버는 직업을 구하라는 부모의 압박 때문에 미술학교를 포기하고 상업학교를 나와 상점에서 일해야 했다. 미로가 오롯이 미술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건 신경증과 심각한 장티푸스를 앓는 등 온몸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난 뒤다. 부모는 미로를 바르셀로나 외곽의 작은 농가로 보내 몸을 추스르게 했고, 그는 거기서 비로소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때 그린 미로의 동네 풍경화에는 파란 하늘과 맑은 햇빛이 가득하다.

1921년, 청년 미로가 마침내 미술의 성지 파리에 입성했다. 그는 '마치 어린애가 울음을 터뜨리듯 그림을 터뜨렸다' 고 회상할 정도로 게걸스럽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댔지만, 실제로는 먹을 게 없어 굶주렸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온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올려다 봤는데, 그럴 때도 천장 위에 온갖 사물과 형태가 떠올라 노트에 그리곤 했다. 그러고 보니 텅 빈 캔버스가 미로가 바라보던 멀건 천장이 아니었나 싶다. 낡은 천장 한구석에서 빗물이 고여 뚝뚝 떨어지듯, 어느 날 작은 구멍이 뚫리더니 고향의 파란 하늘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 같지 않은가.

후안 미로, 이것은 내 꿈의 색이다, 1925년, 캔버스에 유채, 96.5×129.5㎝,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왼쪽 상단에 공들여 쓴 '포토(photo)' 는 '사진' 이 아니라 '빛' 의 의미다.

이후 미로는 초현실주의에 합류해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화폭에 담았다. 원색의 향연 속에 알 수 없는 형상들이 떠다니는 환상적인 그림 속에도 그의 고향 카탈루냐 풍경과 닮은 구석이 반드시 있었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교사는 학원서 거액 받고 제자들은 학원으로, 사교육 요지경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거액을 받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혐의가 드러나 수사 의뢰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가 지난해 9월 교육부 발표 때보다 30여 명 늘어난 56명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능과 모의평가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 교사는 같이 합숙한 교사 8명을 모아 문항 공급 조직까지 만들었다. A씨는 2019~2023년 이들 교사들과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유명 학원 강사 등에게 주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상당수 교사들은 사설 업체에 문제를 판 이력을 숨기고 수능·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대형 입시 학원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나 EBS 수능 교재 감수본과 같았던 배경에도 이런 '사교육 카르텔' 이 있었던 셈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수능과 비슷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번다. 이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직 교사들이 거액을 챙기는 가운데 제자들은 사교육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학원에 판 문제를 그대로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로도 출제했다. 고교 내신은 대입 합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입시 평가 자료다. 교사들이 학원 다닌 학생들이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범죄와 다름없다. 이들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돈을 버는 열성 이상으로 자기 학생들을 가르쳤을 리 없다. 드러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능 출제·감독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제 검증을 부실하게 한 데다 영어 문항 등에서 유착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우연" 운운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보당원이 '시민단체' 둔갑, 민주당 비례대표 다시 검증해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시민 단체 몫으로 떼주기로 한 비례대표 4명 중 여성 후보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가 오디션을 통해 남녀 후보 2명씩을 선발했는데, 이 중 여성 2명이 사실상 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후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 30여 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예정인데, 시민 단체 4명,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이미 3명의 비례대표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2명이 시민 단체 몫으로 '위장 출마' 하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람은 시민 단체가 여성 1·2번으로 선발한 전지예·정영이씨다. 전씨는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단체의 대표 출신이고, 정씨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으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한다. 전씨는 민주당의 전체 비례대표 1번이 될 뻔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진보 당원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시민 단체 오디션에 응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고 한다. 진보당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위헌 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었다. 운동권 내부에서도 저급 주사파로 꼽히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 세력이다. 이들이 이번에 민주당에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3명도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규정한 한총련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이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들이 민주당까지 속이고 민주당을 숙주 삼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한 것이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종북·반미 집단에게까지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한미 동맹이라는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근간을 뛰어넘는 범위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시민 단체 추천 후보는 물론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외부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다.

동영상 사설

은행이 홍콩 ELS 손실 배상, 반복되는 금융 후진성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평균 40% 이상 손실금을 배상할 것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은행의 부실 판매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태는 안전성 위주로 운영돼야 할 은행이 도박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이를 수습하느라 당국이 개입하는 등 한국 금융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4년 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 후 정부가 2021년 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수수료 수입에 목맨 은행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홍콩H지수 연계 ELS를 19조원어치나 팔았다. 실태 조사 결과 은행들이 직원 성과 평가에서 ELS 판매 실적 항목에 30~40% 이상 배점을 부여해 ELS 판매를 부추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들은 ELS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정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내부 규정까지 고쳐 판매 한도를 늘리며 ELS 판매를 독려했다.

금융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후 은행의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를 금지하려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한 은행들 요구를 수용해 ELS 판매는 계속 허용하기로 물꼬를 터주었다. 그런데 그 후 사후 감독과 감시를 소홀히 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은행들의 내부 통제 체제와 당국의 외부 감시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난 것이다.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이다. 모든 투자는 자신이 위험을 떠안는 것이다. 이익이 나면 자신의 몫이고 손해가 나도 자신의 책임이다. ELS 상품을 사려면 반드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부분을 듣고 직접 서명해야만 한다. 금융 지식을 쌓고 상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 하는 것도 투자자 책임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선진국형 해법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투자에서 손해를 본 사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로 결과가 달라진다. 숫자가 많으면 손실을 물어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정부는 이에 굴복해 금융사를 압박한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정부, 은행, 투자자 모두 교훈을 얻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DNA 변했다" 上

'더 지독한 것'이
'덜 지독한 것' 잡아먹는 법 …

이재명 민주당엔
이제 김대중·노무현 없다

미국 온건노조 [내부 와해 공작] 보라
[낡은 집] 헐고 [새 집] 짓기보다는
[셋방] 살다 [집주인] 쫓아내는 수법
동유럽 국가들도 같은 수법으로 잡아먹었다

민주당, 예전 민주당 아니다

지난 7일 YTN 라디오가 물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얼마나 얻겠나?" "1당을 하고 과반은 넘을 것 같다."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의 답변이었다.

홍영표 의원은 또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없애겠다는 기획이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노선·정체성을 다시 만들 내부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조선일보 24년 03/08)

한 칼럼니스트는 민주당의 이런 동향을 이렇게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종북-반미·괴담 세력에 비례대표 위성 정당 앞 순위 10자리를 배정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4년 03/06)

한 마디로
※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당]*처럼 됐다는 것
※ 이념적으로 더 지독해졌다는 것
※ 더는 **김대중·노무현** 때의 민주당이 아니란 것이었다.

이것을 **"민주당의 DNA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한 글도 있었다.

미국 온건노조 잡아먹기

정치세력의 이런 **[DNA 변화]**는 오늘의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19~20세기 ***세계 좌파 운동사***에 숱하게 있었던 일이다.

미국 노동 운동사에선 이를 ***[내부 와해 공작]***(boring from within)이라 불렀다. 더 지독한 좌파가, 덜 지독한 노조에 들어가 그것을 자기들 같은 더 지독한 성격으로 변질시키려던 수법이었다.

1890년대 후반 미국엔 〈사회주의 노동당〉이란 좌익 정당이 있었다. 이 당의 극렬 분파는 미국의 당시 노조 〈AFL〉이 너무 뜨듯, 미지근하다 해서 불만이었다.

그들은 그 시원찮은 노조에 침투해 그것을 극렬한 성격으로 바꾸려 했다. 이들의 노림수는 이랬다.

"혁명적인 노동운동을 건설하려면, 먼저 낡은 노조 안에다 새 구조물을 심어 넣어야 한다."

셋방 살다 집주인 잡아먹기

이 방법은, 낡은 집 밖에 새집을 지어 그것으로 낡은 집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것과는 다르다. 이건 너무 힘들고,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보다는 낡은 집 안에 셋방을 들어 살다가, 점차 집 전체를 먹어버리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 아니냐, 계산이다.

① 급진적인 노동자들이 우선 기존의 미온적인 노조에 가입한다.
② 노조원 다수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③ 동조자가 늘어나면 지도부에 선거로 파고든다.
④ 지도부에 뿌리를 내리면, 어느 날 노선을 급진적인 것으로 확 틀어버린다. 이게 **[내부와해 공작]**의 순서였다.

동유럽 국가 잡아먹기

이런 수법이 2차대전 직후 동유럽 각국에서 재활용되었다. 흔히 동유럽에 주둔한 소련군 덕택에 그 나라들이 ***[극좌 독재]***로 넘어갔다고들 한다.

소련의 영향력이 물론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는 민주주의 후진국도 아니었고, 소련 주둔군도 없었다. 그런데도 ***[극좌 일당독재]***로 넘어갔다. 왜?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더 지독한]*** 좌파가, ***[덜 지독한]*** 좌파, 사회민주당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 합친 머릿수로, ***[극좌 독재]***를 ***[투표로] [합법적으로]*** 가결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더 지독한]*** 것이 ***[덜 지독한]*** 것을 ***[합법적으로]*** 먹어간 사례가 없었나?

이에 대해선, 내일(2024/3/13) **하(下)** 편에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김덕영 칼럼: 영화평론계의 집단 사보타지
영화평론가들은 왜, 100만 영화 〈건국전쟁〉에 평을 하지 않는가

김덕영 칼럼: 신중봉 논설위원에게 묻는다
중앙일보는 왜, 100만 영화 〈건국전쟁〉을 왜곡 폄하·비방 하나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3월 1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78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